"회계관리 부실·관광 인프라 미흡 대책은"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광주시의회는 15일 제 17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14일에 이어 3일째 광주시 행정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광주시가 비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질책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미흡한 관광 인프라 등에 대해 우려도 표시했다.

5년간 유휴자금 이자 손실액만 100억여원 달해

亞 문화전당 주변 '문화체험형' 거점지역 추진중

◇이자도 제대로 못 챙겨=손재홍(민주·동구 2)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795건(1조427억7천900만원)의 정기 예금을 중간에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 손실금만 99억8천479만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시가 세밀한 자금 운영 계획을 세웠다면 중간에 해지하지 않아도 돼 102억9천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자금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바람에 결국 3억500만원의 이자만 받았다는 것이 손 의원측 지적이다.

손 의원은 "정기 예금 상품에 예치한 뒤 15일이 지나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경우만 395건에 달하고 특히 16건은 하루만 더 예치했어도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해지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경우 219건을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가 중간에 해지했는데, 이 가운데 88건은 한 푼의 이자도 건지지 못했다는 것.

광주시는 이와관련, "담당자의 자금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돌발적 자금 수요가 발생,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등 자금 수급 상황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모두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보통예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자 손실액은 2억1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턱없이 부족한 관광 인프라=김성숙(민주·서구 3)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중인 광주시의 열악한 관광 인프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세계적 문화관광도시가 되겠다는데, 방문객이 둘러볼 만한 곳도 마땅치 않고 특급호텔 등 편의시설도 절대 부족한데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매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615만5천명에 달하는데, 광주는 고작 18만명"이라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로드맵은 뭐냐"고 추궁했다.

광주시는 이에대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이 국내외 관광객들의 문화체험형 관광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복합쇼핑센터, 역사문화마을 조성,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대한 공감대 확대 차원에서 광주와 북한 신의주 대학생들간 축구대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李 대통령 새 국제기구 창설 제안 배경은

"세계질서 아시아로 중심 이동 IMF 등 경제위기에 맥 못춰"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제안 배경과 기구의 성격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새 국제기구는 최근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최근 세계 경제위기로 지난 1944년 이후 국제 경제질서의 거대한 축을 형성해 온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

특히 미국이 국내 금융시스템 붕괴로 국제적 위상에 손상을 입으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가 이런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청와대 핵심 참모는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기존의 경제관련 국제기구들이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이 대통령이 새로운 기구 창설을 제안한 배경으로 여겨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내에 예정된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 플러스3 회의 등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제안이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핵심 참모는 "유엔 산하에 기후변화 관련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라며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하면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가 브리핑

예결특委 위원 선정 잡음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고있다.

도의회는 15일 제236회 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9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위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친 말싸움이 오가는 등 회의 진행이 잠시 중단됐다.

위원 선정에 반대한 의원들은 위원 선정이 현 의장단 쪽에 편중됐다는 입장으로 한 의원은 "일부 시군은 2명씩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8개 시군은 한명도 예결위에 들어가 못했으며 의원 8명은 2번씩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다른 의원 4명은 한번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전반기 의장단과 후반기 신임 의장단 사이에 '말발' 잘 먹히는 예결위를 놓고 '밥그릇'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재소자 인권 보호·교정시설 개선에 공감

국회 법사위 장흥교도소 시찰

유선호(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정감사 일환으로 장흥교도소 시찰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인권보호 논란을 빚고 있는 배식구 등 내부시설을 1시간20여분에 걸쳐 둘러봤다. /위직량기자 jrwi@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민주당의원)는 15일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낡고 오래된 장흥교도소를 국정감사 일환으로 시찰했다.

13명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박현조 장흥교도소장으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재소자들이 있는 사동, 취사장, 목공소 양복점 등 시설물을 1시간20여분에 걸쳐 둘러봤다.

첫 질의에 나선 이한성(한나라당)의원은 장흥교도소 이전 방안과 신축될 교도소 규모, 현 부지의 활용 방안 등을 물었다.

박지원(민주당)의원은 "2년간 교도소 감방생활을 해본 경험자로 교도관들에게 신세도 많이 졌다"고 말문을 연뒤 "안타깝게도 전국 대부분 교도관 사무실에 난방시설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흥교도소 냉난방 실태와 재소자 인권보호 및 교도관들의 처우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주영(한나라당)의원은 "전문의와 의료장비가 열악한 의료환경상 재소자들이 몸이 아플 경우 외부 병원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갑과 포승줄이 묶인 채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성영(한나라당)의원은 재소자들의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로 교도관들의 피해는 없는지 따졌다.

이에 대해 박현조 장흥교도소장은 "신설될 장흥교도소는 오는 2010년 착공돼 2012년 준공 예정으로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의 교도소는 장흥군이 매입해 출향인들의 편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친 의원들은 이어 수형자방을 비롯한 교도소 내부시설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재소자들이 있는 제 5분임방에 들어가, 인권문제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배식구 상태와 세면기, 침구류와 화장실 등 내부시설을 꼼꼼히 살폈다.

의원들은 내부시실이 상당히 개선됐다는데 공감했으나, 배식구 높이에 대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박지원의원은 "자신이 생활했던 서울 구치소는 감방인원도 많을 뿐 아니라 내부시설 또한 장흥교도소 보다 훨씬 못하다"며 교정 행정이 발전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재외국민에 투표권 부여"

선관위, 현지·우편투표 등 제도 개편 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30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에게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양어선 등 선원 1만여명에게도 투표권 보장을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투표권 부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 기간 국외 체류가 예정돼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에 한해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거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300만명 중 240만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134만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과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언론기관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고, 선거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허용하는 한편 확성장치 소음규제 강화, 야간 전화 여론조사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의견을 냈다.

이외 예비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시에도 기탁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직을 사퇴할 경우와 낙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다시 국고로 반환토록 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연합뉴스